

지자체 조기집행 실적 저조

1분기 목표 2조3831억 중 1조5038억 집행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 강릉 77% 최고

강원도가 올해 도 본청과 시·군의 조기집행 예산액 9조 5158억원 가운데 2조 3831억원을 1분기에 집행할 계획이지만 목표에 턱없이 모자란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본청은 올해 조기 집행 예산 4조 5100억원 가운데 1조 1617억원, 시·군

은 조기집행 예산 5조58억원 중 1조 2214억원을 1분기 집행 목표로 각각 설정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현재 도 본청 재정 집행액은 7712억원으로 목표대비 66.4%에 그치고 있다.
시·군도 7326억원을 집행하는데 그

쳐 6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1분기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도 전체 재정집행률이 목표 집행률보다도 턱없이 모자란 재정집행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히 시·군의 재정집행이 지지부진해 도 전체 재정집행률을 낮추고 있다.
현재 재정 집행률이 70% 미만인 시·군은 춘천, 원주, 동해,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15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평창(48.24%)과 양구

(46.67%),고성(45.79%) 등 3개 지역은 집행률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릉시가 77.27%의 집행률을 보여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조기집행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강원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재정집행 실적이 하위권인 15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도는 현재 총 조기집행 예산 9조5158억원 가운데 1조 5038억원을 집행해 15.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선금, 민간경상보조금, 사무관리비 등 집행가능한 사업을 발굴,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 실행해 1분기 목표 달성에 힘쓰겠다"며 고 말했다. 백오인 106m@kado.net

“반갑다 대규모 공사 입찰”

강원건설이 불황 속에서도 이달 들어 전체 1000억원 규모의 공사가 개찰되거나 입찰이 예정돼 있어 건설경기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화천군이 발주한 388억원 규모의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가 지난 22일 개찰,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1순위에 올라 적격심사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흥천 진성종합건설과 49%의 지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에 참가했다.

388억원 화천 간동정수장·속초 여객터미널 개찰
이달 만 975억원 발주·800억원 춘천시청사 예정

화천군은 당초 '상수도 송·배수관 관경 D 150mm 이상, 32.38km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등 실적제한을 했다가 지역 건설업체들의 반발로 기준을 완화,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날 강원도 한동해본부가 발주한 181억원 규모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도 입찰·마감됐다.

개찰 결과, 전북 업체인 신일이 1순위에 올랐으며 도내 A업체가 지분율 49%로 공사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앞서 마감된 431억원 규모의 원주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간)개설 사업도 서울 삼환이 공사를 수주했으며 도내 B업체가 49% 지분율로 공사를 맡게 됐다. 이달에만 조달청에 의뢰된 시설 공사 입찰 규모는 총

17건에 975억원이다.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종합심사낙찰제에 적용될 800억원 규모의 춘천시청사 입찰도 이달 말 공고될 예정이다.
강원조달청 관계자는 "사실상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규모 입찰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원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시설 공사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원주~강릉철 건설장비 대금 체불

제2공구 한진중공업
하청업체 2곳 미지급
한진 "이달안에 해결"

원주-강릉 복선 전철 공사 현장 일부 공구에서 건설 장비 임대료를 체불해 말썽을 빚고 있다.
24일 전국건설기계 강원원주연합회에 따르면 원주-강릉 복선전철 제2공구 건설 공사들 맞고 있는 한진중공업

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하청업체 2곳에 건설 장비 임대료를 4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이 2개업체에 체불한 장비 임대료는 모두 2억8000만원에 이르며 피해 근로자도 55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철도수송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2011년 7월 원주-강릉간 복선 전철 사업 추

진에 나섰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3년 원주-횡성간 2공구(11.57km)구간의 시공사로 한진중공업을 최종 선정했다.
한진중공업은 이 구간의 터널 굴착 및 노반공사를 위해 지난 2013년과 2014년 이들 2개 업체와 장비사용 하도급 계약을 체결,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 12월부터 건설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영세업체인 두 업체는 임대료 체불로 현재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업체

관계자인 최모(42)씨는 "1~2개월도 아니고 벌써 4개월이나 장비 임대료가 체불되면서 근로자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직접 나서 임대료 체불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2개업체 중 한 곳의 체불금은 이달 말 모두 해결할 계획이지만 또다른 한곳은 현재 법정관리로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주/정성원

불공정행위 신고업체에 보복하면 입찰참가제한

·공정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추진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하도급업체에 보복을 가할 경우 바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제산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벤처업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사업자가 한 차례의 보복행위를 하더라도 즉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때이는 등 불공정행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과징금 이상의 제재조치가 결정된 심각한 보복행위는 곧바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하도록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지난해 3월부터 운영 중인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업체 대표들은 원경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정위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기업들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 5월 중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유용 협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기성액 쓸림 심화

지난해 총 2조7813억원 중 상위 10개 업체가 37% 차지
요진건설산업 홀로 17% 달성

건협 강원도회 소속 기성액 상위 건설사



지난해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소속 건설사 가운데 기성액 순위 상위 10대 건설사의 기성액이 전체 기성액의 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건설사들의 기성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났지만 증가분의 대부분은 일부 상위권 건설사에 집중됐다.

24일 건협 강원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속 건설사의 전체 기성액 2조7813억2600만원 가운데 상위 10위 업체 기성액 규모는 1조466억3200만원으로 조사됐다. 469개 건설사 중에 10개 업체가 전체 기성액의 37%를 차지한 것이다. 지난해 강원지역 기성액 규모는 전년도보다 17% 정도 늘었지만 대부분이 상위권 건설사에 쏠린 것이다.

요진건설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기성액 순위 1위를 유지한 요진건설산업의 지난해 기성액은 4805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2270억2000만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요진건설산업의 기성액은 강원지역 전체 기성액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요진건설산업이 추진한 일산 와이시티(W city)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기성액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현대이산이 1000억원 넘는 기성

액(1095억4800만원)을 기록해 요진건설산업에 이어 기성액 순위 2위를 기록했고, 동일건설(908억원)과 대림종합건설(803억원)이 뒤를 이었다. 2014년 기성액 순위 11위에 이름을 올렸던 에스지건설은 지난해 5위로 뛰어올라 눈길을 끌었다.

반면 10위권 밖의 건설사들의 기성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11위에서 30위권 건설사의 기성 비율은 15.9%였고, 31위에서 50위권 건설사의 기성 비율은 9%에 불과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기성을 올린 건설사는 전체의 11% 정도인 55개사에 불과했다. 151개사(31.9%)는 지난해 기성액이 10억원이 안 됐고, 11개사(2.3%)는 기성액 실적이 없었다.

도회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의 기성액 증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올해 건설수주액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與野, 강원지역 충전 공약 속속 발표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한목소리

여야의 강원지역 국회의원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각 정당 강원도당은 소속 후보 당선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이 내세운 최우선 해결 과제는 규제 철폐다. 이는 '규제공화국'으로 불리는 강원도를 겨냥한 맞춤 공약이다.

아울러 스포림픽 문화유산으로 미래가치 창출 스유라시아 전진기지 스키2경축국도 신설
△보훈요양원 건립 등 5가지를 약속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인평창·정선·강릉

과 인근 도시인 태백·영월 등 폐광지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등 관광인프라 구축도 제시했다. 동해북부선과 금강산선(철원역~내금강) 복원사업 조기 추진을 통해 도를 부활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 공약은 원주권 표심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단기간 내내 공약을 포함한 당 차원의 공약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당 차원의 공약 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은 중앙당 차원에서 경제·복지 부문의 공약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정지권이 속속 공약을 내놓자 강원도민들도 숙원사업 해결을 요구하며

유권자 권리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강원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현안대책위는) 최근 폐광지역 공동발전도모를 위해 새누리당·민주당 강원도당에 5개항 공약을 제안했다.

현안대책위가 제안한 주요 공약은 폐광지역개발기금(기금) 법적 배분 준수,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지역투자 확대, 국도31·35·38 호선 접근도로망 조기 확충, 폐광지역 도로관리청 이관을 위한 도로법 개정 등이다.

대책위는 제안서를 통해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해마다 중대한 사안인 기금의 경우 법률에 의하지 않고 강원도 임의 배분 때문에 태백시의 경우 2015년 한 해에 약 156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랜드 설립 목적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공약 반영과 함께 2017년부터 법률에 의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속초시 등은 이번에도 서울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 건립 확정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동서고속철도 건립이 단골 공약으로 나왔지만, 정치권의 거둬먹는 거짓말에 상실감이 큰 모양새다.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 이를 현실로 옮길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준다는 생각이다.

최남영기자 hinews@